

# 제21대 국회의원선거

## 기본소득당 정책

● 기본소득당

# 1.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

## □ 목표

-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
  - 자동화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,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복지체계는 사각지대만 늘림, 새로운 대안이 필요
  - 기본소득은 공통 부에 대한 시민의 분배에 대한 권리
  - 월 60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(약 52만원)에 준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지급

## □ 이행방법

- 기본소득법을 국회에서 입법화
  - 기본소득법 입법화 이후, '기본소득위원회'구성
  - '기본소득위원회'가 매년 기본소득 지급액수 조정

## □ 이행기간

- 2020년 매월 60만 원부터
  - 매년 물가상승률, 중위소득 등 최소 생계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

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시민재분배기여금
  - 모든 소득에 15% 부과
  - EITC(근로장려세제) 등 선별적 복지예산 통합
- 탄소세, 핵발전 위험세 부과
  - 탄소배출량 1환산톤 당 10만 원 씩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
  - 핵발전 1kwh 당 60원의 핵발전위험세 부과
- 토지보유세 부과
  - 모든 민간 소유토지에 1.5%씩 토지보유세 부과

## 2. 데이터 배당 실시

### □ 목표

- 데이터 배당 실시로, 미래사회의 데이터 주권확보
  -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로 산업전반이 이동
  -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
  - 빅데이터를 통한 이윤에 대한 국민의 공유지분권을 확보

### □ 이행방법

- 국가 차원의 '빅데이터공유기금' 구성
  -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% 환수하여 데이터 배당 실시 (최대 10%까지)
  - '빅데이터공유기금'은 데이터배당을 위한 기금마련과 동시에,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실행 및 감시 역할 진행 {ex. 유럽연합의 GDPR(개인정보보호법안)}

### □ 이행기간

- 2020년 '빅데이터공유기금' 구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세부안 마련
- 2021년 본격적인 실시

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국가 차원의 '빅데이터공유기금' 구성
  -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% 환수하여 데이터 배당 실시 (최대 10%까지)
-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초국가적 합의 구성 및 이익환수

### 3. 민주주의 배당 실시

#### □ 목표

- 민주주의 배당 실시로 아래로부터 정치개혁 실시
  -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치자금세액공제는 불평등한 제도
  - 보수양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혁신
  - 국민 모두 정치참여 가능한 방안

#### □ 이행방법

- 현행 정치자금세액공제 폐지
- 매년 10만 원 쓰지않으면 사라지는 민주주의 배당액 지급
  - 정당후원에 제한 두는 금액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짐

#### □ 이행기간

- 2021년부터 실시
  - 정치자금세액공제 제도 폐지이후

#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, 선거비용 보존 등의 비용 조정
- 국가 일반재정으로 지급

## 4. 5대 공공·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① - 무상 대중교통 실시

### □ 목표

- 무상대중교통의 전면적 실시로, 모두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
  - 전국 시내·광역버스·지하철 전면 무료화
  - 버스 의무 최소 노선제 실시, 산간·벽지 교통인프라 부족 지역 '100원택시' 실시
  -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최적화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

### □ 이행방법

- 전국 시내·광역버스·지하철 전면 무료화
  - 공공운영 대중교통, 민간운영 대중교통의 재정·운영 방식 개입
- 버스 의무 최소 노선제, 산간·벽지 교통인프라 부족 지역 '100원택시' 실시
  - 적자 노선 임의 폐지 등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 해소
  - 공공데이터 활용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전국 교통복지 실현

### □ 이행기간

- 2020년
  - 공공운영 대중교통, 민간운영 대중교통의 재정·운영 방식 검토
  - 기준미달 시 정부에서 인수
  - 지자체별 교통공공데이터 공유
- 2021년
  - 열악한 교통인프라 중심으로 우선 무상대중교통실시
- 2022년
  - 서울 등 전국적 확대 실시

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소득공제/세액공제 전면 폐지 후 추가된 재원 사용
- 기업의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

## 5. 5대 공공·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② - 무상 보육/돌봄 서비스

### □ 목표

- 전면적 무상 보육/돌봄 서비스 도입으로, 모두를 위한 돌봄 체계로
  - 무상 보육/돌봄 서비스 실시
  - 국공립 보육 시설 확장 및 사립 보육시설 공공성 강화
  - 국공립 돌봄 서비스 및 시설 확장
  - 보육/돌봄 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제고

### □ 이행방법

- 무상 보육/돌봄 서비스 실시
  - 공공 보육/돌봄 서비스 기관 및 민간 서비스 기관 재정 및 운영 검토 및 개입
  - 민간 운영을 공적체계로 편입하여 '시장실패'로 인한 고비용 해소
- 국공립 보육 시설 확장
  - 민간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은 1/5 수준, 매년 50%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
  - 운영 검토를 통해 기준 미달인 사립보육시설은 인수하여 국공립으로 전환
- 공공 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장
  -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금 확충
  - 공공 운영서비스기관은 1% 내외, 대폭적인 공공운영서비스기관 확충

### □ 이행기간

- 2020년 부터
  - 민간운영 시설/서비스 제공기관 재정·운영 방식 검토
  - 기준미달 시 정부에서 인수
  - 공공 보육/돌봄 서비스 대폭 확장실시

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소득공제/세액공제 전면 폐지 후 추가된 재원 사용
- 기업의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

## 6. 5대 공공·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③ - 무상 교육

### □ 목표

- 전면적 무상 교육 실시로, 모두를 위한 교육체계를
  -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학자금 부채 탕감
  - 국공립 대학 확충, 공영형 사립대학 및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·확대

### □ 이행방법

-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학자금 부채 탕감
  -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.5%에 불과
  - 절반 이상 등록금 지원 받는 비율은 13% 내외
  - 학자금 부채는 약 1.1조원 (2018)
- 국공립 대학 확충, 공영형 사립대학 및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·확대
  - 국공립대학 29개소, 사립대학은 154개소
  - 공영형 사립대 확충 및 국공립대학 대폭 비율 확대
  - 대학간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

### □ 이행기간

- 2020년 부터
  - 국공립 대학, 사립 대학 재정·운영 방식 검토
  - 기준미달 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
  - 무상교육 실시

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소득공제/세액공제 전면 폐지 후 추가된 재원 사용
- 기업의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

## 7. 5대 공공·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④ - 무상 의료 및 공공병원 확대

### □ 목표

- 전면적 무상 의료 실시 및 공공병원 확대로, 모두를 위한 의료체계를
  -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개혁
  -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
  -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

### □ 이행방법

-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개혁
  - 소수 대학병원과 다수 중소병원으로 이분화된 현행 구조를 거점별 10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 신축 또는 통합 추진
  - 신·증축 또는 중소병원의 통합과정을 통해 공공병원 비율을 30%수준으로 확대
-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
  -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수준에서부터 장애인, 만성질환자, 노인, 영유아, 아동 등 연령별, 집단별 통합적 주치의제도 모델 마련
  - 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한 일차의료시설 금융지원 및 지불보상단위 규격화
-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
  - 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의료비 부담이 18% 차지 (3위)
  - 공공병원확대와 주치의제도 확립을 바탕으로 질 좋은 무상의료 실시

### □ 이행기간

- 2020년 부터
  -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영 중심 의료공급구조 개혁
- 2021년 부터
  -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
  -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

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소득공제/세액공제 전면 폐지 후 추가된 재원 사용
- 기업의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



## 8. 5대 공공·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⑤ - 공공임대주택확장

### □ 목표

- 전면적 공공임대주택 확대로,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를
  - 공공임대주택 확장(6.8%에서 20%까지)
  -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 개정

### □ 이행방법

- 공공임대주택 확장(6.8%에서 20%까지)
  -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은 6.8% (OECD 평균 13%)
  - 주택보급률 102.6% 자가 보유율 59.9%
  - 신규공급대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0년 이내 20% 달성
-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 개정
  - 남녀결함으로 인한 가족 중심으로 설계되어있는 선정기준 개정
  -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준 마련

### □ 이행기간

- 2020년
  - 2020 정부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예산안 16조 편성 (8-10만호 목표)
  - 신규공급 방식보다 저렴한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편성
- 2021년 부터
  - 보다 확대된 예산으로 매년 25만호(전체주택중 1.3%) 공공임대주택 확대

### □ 자원조달방안 등

- 소득공제/세액공제 전면 폐지 후 추가된 자원 사용
- 기업의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

## 9.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'성평등임금법' 제정

### □ 목표

- '성평등임금법' 제정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
  - 한국 성별임금격차 34.6% (OECD 성별임금격차 통계 이래 16년째 1위)
  - 경력·고용 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율 이상의 성별임금격차, 직장내 성차별 문제 해소 필요

### □ 이행방법

- '성평등임금법' 제정
  - '성평등임금위원회' 구성을 통한 성별임금체계 심사 및 당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선 구축 (34.6% → 최소 OECD 평균 14.1)%
  -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성별임금격차 현황 공개
  - 산업별, 직종별 성별 임금 격차 통계 구축 및 고시
  - 동일노동-동일임금 규정 명시

### □ 이행기간

- 2020년 국회 '성평등임금법' 제정
- 2020년 '성평등임금위원회' 구축
  - 매년 최저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기업별, 산업별 강제

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정부 일반재정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

## 10. 공공 사회정책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

### □ 목표

- 세제개편을 통한 공공·사회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
  - GDP 대비 공공·사회서비스 분야의 공적 지출은 11.1% (OECD 29개국 중 29위, OECD평균 20.1%)
  - 한국의 재분배 시스템은 소득감면·세액공제·소득공제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,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임
  - 소득공제·세액공제는 본디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지 않고 특정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나, 재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다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

### □ 이행방법

- 소득공제·세액공제를 없앤 과세표준에 따른 추가 과세
-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
  - 현행 200억 원 초과가 법인세율 최고구간
  - 개편안 1000억 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 최고구간 신설
- 추가 마련된 재원은 공공·사회서비스 무상 및 확대 정책에 사용

### □ 이행기간

- 2020년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
- 2021년 개편한 세제안을 바탕으로 무상 공공/사회서비스 전환을 위한 목적 기금으로 사용

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정확한 세무조사를 위한 용역·연구비용 추가는 국가일반재정에서 사용